

일본의 발전경로와 사회적 토대: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서문기 승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일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구의 발전주의와는 성격이 다른 형태의 발전양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발전경로를 진단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왜 그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배태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일본 발전국가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구조와 가족모델은 더 이상 수용 가능하지 않으며, 고용모델에 완전히 통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 평등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승이동에 관한 전장효과와 인구학적 변동을 반영하여 일본의 중산층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세계화과정과 가치체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안겨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발전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국가의 성공 자체가 역설적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왔지만, 사회적 토대와 모델의 재설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발전경로, 일본국가, 사회적 토대, 지속가능성

I. 서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업국은 사회발전의 지형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과 위기를 경험하여 각 이론적 진영에서 선호하는 사례이며,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중국이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경제적 위상 면에서 크게 부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사

* 이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0448A-2017000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논문작성에 도움을 주신 R. Marsh 및 D. Rueschemeyer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익명 심사자들과 자료 수집과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심상은 조교에게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회적 관심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 발전경로의 핵심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며,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 발전의 주요 목표가 된다. 이러한 발전경로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논쟁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주로 일본 발전모델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와 원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신(新)고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적 지형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면서 경제자유화와 시장순응 전략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비록 국가개입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측면이며 오히려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행·재정적 특혜와 같은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의 감소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Chang, 2006; 김시윤, 1999). 반면에 대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대추구의 범주가 상당히 컸음에도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갈등과 도전을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윤영관, 1999).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가주도의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기업체가 생산 활동에 집중하고 시장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발전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인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쟁점을 남기고 있으며, 국가개입의 효과에서 중요한 사실은 국가개입의 정도나 수준이라기보다 국가개입의 질(質) 또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서문기, 2016). 경험적 차원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서구의 사례와 대비됨으로써 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국가의 효과는 역사적 부침을 통해 불명확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또는 정책적인 틀에서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윤상우, 2005). 이에 발전국가의 전형이자 국제지형에서 중심국의 위치를 갖는 일본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본경제의 성장, 정체, 회복에 따른 사회적 발전과 위기의 이면에는 발

전국가가 가능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발전경로의 구조적 특성이 놓여 있다. 발전경로의 역동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하여 접근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국가개입의 질을 규정하는 사회적 토대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고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포스트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발전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국가들의 발전전망에 대한 좋은 사례로 간주된다. 발전국가의 시장 및 사회에 대한 개입 방식은 발전전략과 공공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일본모델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Katada, 2013). 오늘날 서구의 발전모델이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점차 잃어 감에 따라 일본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례로 다가오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발전국가가 전후 경제를 주도해 왔지만, 이후 일본의 국가엘리트는 발전국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급속하게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제와 사회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악화시킴으로써 그 결과 발전국가의 효용성은 광범위한 비판과 함께 위기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Macintyre and Naughton, 2005).

일본의 발전경로에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과정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구의 발전주의와는 성격이 다른 형태의 발전양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발전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검토하고 일본에서의 전개과정에 따른 성격을 진단하여 발전국가의 효과를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토대에 기초한 경로의존성을 규명하고 발전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포스트 발전국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천착하고 발전경로를 조망함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발전국가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왜 그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배태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요컨대, 발전국가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연속성과 비(非)연속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후(戰

後)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사회발전의 실제적인 의미와 향후 전망을 가늠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본론

1. 일본의 발전경로

일본의 발전사례를 둘러싼 이론지형에서의 치열한 다툼은 초기의 시장경제론의 우세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론의 강점이 강조되다가 외환위기의 정체기를 지나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혼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Johnson, 1995; 임혜란, 2018). 그러나 발전유형을 국가 대 시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비(非)역사적인 사고로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국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발전국가에 의해 자본주의 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국가개입과 사회적 토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지지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발전국가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능력과 사회집단으로부터의 독립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개입은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단과 함께 사회발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Suh, 1998). 그 결과 국가정책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토대란 국가와 시장 및 사회의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공식적·비(非)공식적인 사회조직의 구성 원리를 말하며, 상호 간에 복합적으로 연결될수록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증가한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Evans, 1995).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과 정체감을 갖는 행위자 집단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사회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토대는 하위 수준의 세부 모델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배타적이고 긴밀한 구조이거나 아니면 포괄적이지만 분절적인 구조의 성격을 갖는 경향이 많다.

삶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압력은 국가가 발전전략의 정당성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농지개혁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원의 동원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의 발전국가는 서로 다른 경제 및 정치사상의 대립구도를 갖는 서구와 달리 강력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확립하여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재건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다. 관료들은 제도 및 문화적 특성으로 여타 집단에 비해 상당한 특권을 향유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체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계급이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전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따라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갈등이나 혼란 없이 경제운영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Schaede, 1995). 아울러 일본 기업체(keiretsu)의 네트워크 구조는 제도화된 사회관계의 광범위한 배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를 단결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Haggard, 1990). 이는 기업체에서 평생고용이라는 특징적인 체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체 목표에 대한 집단적인 노력이 이루어질수록 사회경제적 토대가 매우 유용한 전략적 자산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서구와의 무역불균형과 국내시장의 개방 압력에 대해 일본은 강력한 대내적 통합능력을 보여 주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일본의 경우 지정학적 요소가 국가개입의 질을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사사다, 2014). 지정학적인 냉전 구도에서 일본은 전후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음으로써 광범위한 산업과 사회간접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였다. 이는 자유진영의 국제질서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맞물리면서 일본이 세계화과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Latham, 1997). 초기 단계에서 일본은 국제무역의 규모가 가장 큰 유럽과 북미 시장에 대해 특별한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했으며, 급격하게 팽창하는 국제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특히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 채 외부와의 교류과정에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의존과 안보관계에서 비(非)타협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지정학적 맥락의 변화에서 잠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Hughes and Fukushima, 2004). 예를 들어, 국제지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환율조정 과정에 미국이 일본의 협력을 요구할 때,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팽창하자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5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달러 절하와 엔화 및 마르크화의 절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이듬해부터 수출산업의 불황을 시작으로 일본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하였다(Shibagaki, 1994).

그러나 엔고불황이라 하더라도 비(非)수출산업은 오히려 호황이라서 수입물가가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경기가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엔고에 의한 수출가격 인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부문에서 감량경영과 합리화 노력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출가격의 인상폭을 20% 이하로 억제하기도 하였다(유재원, 2013). 단기적으로는 엔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련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초래하여 그 반향효과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역설적인 상황에까지 놓인다. 첫 번째 효과는 엔화 절상을 보상하기 위한 자국의 통화정책이 느슨해짐에 따라 투기적인 거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엔고와 함께 일본에서 사업하는 비용의 증가는 두 번째 효과를 가져왔는데, 일본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출지향적인 기업체들의 역외 이주와 비(非)효율적인 국내 산업 및 시장 부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근원적인 정치적 역동성과 경제적 구조가 이전에는 무역흑자에 의존하여 지원금을 충당하였지만 이러한 관행은 점점 증가하는 국제경쟁의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개혁에 대한 압력을 초래하였다.

일본에서 금융자유화가 은행과 산업 부문의 긴장을 완화시켜 왔으며 재무성과 같은 정부기구의 정책수단들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에 비추어 개혁 자체는 강력한 폭발력을 동반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일본 재무성은 변화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향

력을 제한시키는 바로 그 개혁과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Amyx, 2004). 금융규제는 주로 정부의 담당기관과 금융 제도부문의 비(非)공식적인 네트워크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규칙에 따른 절차라기보다는 자유재량에 의존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발전국가에 스며들어 있는 정책 네트워크와 정치적 합리성은 규제 체제를 단지 재구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금융부문의 통합이 세계화과정의 여타 측면보다도 훨씬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일본 국내의 규제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금융부문 개혁과정에서 보여 준 제한된 범위의 효과는 다소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 준다. 개혁의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의 개혁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많은 사람이 구(舊)체제에서 강력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를 추구하거나 로비를 할 동기 부여는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권영주 외, 2001). 그러므로 일본이 당면한 문제는 비록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토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기존의 발전모델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적 수단과 발전국가의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켜 왔던 것이다.

일본의 발전국가가 전후 회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발전국가의 사회적 역기능도 증가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발전경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강력한 국가자율성과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성기에서도 발전국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적 자금을 낭비하는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의해 포획되는 상태에서 정책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주노중·이우형, 2017). 그러므로 일본 정치체제의 최대 약점이자 특징은 주요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며,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의 현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일본의 근원적인 위기는 기존의 모델에 집착하는 데서 기인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미래의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험적 사례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발전국가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여 발전경로에 관한 깊은 통찰력과 의미 있는 사회적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비교연구의 잣대가 된다고 하겠다.

2. 사회적 토대의 구조와 역할

발전국가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전양식은 고도성장과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특징되는 일본 모델의 핵심 요소로서 이해되어 왔다(So, 1990; Wade, 1990). 그러나 경제침체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부분 발전국가를 다원화된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Gibney, 1998; Katz, 1998). 일본의 발전 개혁에 대한 연구들은 발전자본주의 양식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Hall, 2004), 새로운 발전방향과 변혁과정이 기존의 발전양식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정치 및 경제 엘리트의 네트워크 구조는 발전국가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관성적인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Önis, 1991; Vogel, 2006). 그럼에도 국가의 발전전략은 사회구성원에 의해 지지되고 공유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하기에 바로 이 점에서 발전국가는 사회적 토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Davis, 2004).

일본이 전후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체제안정이나 성장 및 수출 정책에 대한 국가의 선도적 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및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전략을 지지해 주는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필수적인 우선조건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이며, 이는 이후 일본의 고용모델로 통합되어 고용보장과 보수 및 승진에 관한 연공서열, 구성원의 협동관계라는 구조적 특성을 배태하게 된다. 노사관계의 제도화는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확장되어 갔으며, 그 이면에는 일본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적 전통 안에서 회사를 가족이나 공동체로 보고 구성원의 깊은 연대를 강조하는 가치체계가 놓여 있다. 고용모델이 중·소기업체까지 적용되면서 일본의 지배적인 규범이 됨에 따라 국가는 노동력을 경제성장 전략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발전양식은 가족구조에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의 역할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여성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성장전략에 통합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도시가족의 이상형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분업에

의해 확실히 구분되는데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여성은 현모양처로서 가사업무를 맡는 것이다. 서구에서 평등한 성 역할에 의한 분업구조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남성 위주의 위계질서 아래 역할분담에 따른 정직과 성실의 규범이 강조되고 가정관리와 자녀교육은 여성의 의무가 되어 배타적으로 조정하게 된다(Reischauer and Craig, 1973).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사회발전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성이 업무에 몰입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발전국가의 전략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저변에서 지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가사 및 육아 노동으로부터 남성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기업체나 국가 및 사회조직체에 완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평생고용모델이 완성될 수 있었다. 만약 거의 모든 가사의무로부터 남성을 해방시킴으로써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 주는 여성의 역할과 지지가 없다면, 남성은 본연의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여 조직체와 일체가 되는 소위 회사인간(company man)이 결코 될 수가 없을 뿐더러 국가는 경제적 성과를 이끄는 동력원을 상실하게 된다.

비록 이상적인 가족모델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사에 국한되지만, 그럼에도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인력이 시간제 노동 및 임시직 업무에 종사하거나 가족회사의 일을 도움으로써 일종의 보조노동력으로서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Suh, 2017). 일본 남성의 안정적인 고용상태와 달리 여성의 노동인력은 주기적인 경제 흐름과 외부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제도화된 성 역할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여성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은 노동 불만이 나 노조 파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노인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기에서 대다수 노년층은 주로 장남의 부인인 큰며느리를 포함하여 가족에 의해서 돌보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지불하는 복지비용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작은 복지체계의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이다(Yu, 2005). 사회복지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역할은 생산적 복지국가를 향한 길을 터주어 향후 국가의 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요컨

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발전양식의 숨겨진 사회 자본으로 일본의 가족모델이 제도화되는 데 공헌하게 된다.

오늘날 일본은 이전의 고도성장 단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기술 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수출이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 경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발전자본주의 양식의 고도화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 주체가 된 일본은 사회구성원의 수동적인 지지를 받는 것 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발전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전통사회는 자기수양, 근면, 신뢰와 같은 가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후 농지개혁을 통해 국가가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사실 국가의 성장계획과는 특별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발전국가양식을 계속해서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용인인 기업체나 정부의 경제목표에 자신들의 목표를 통합시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 대답은 일반적인 중산층모델의 제도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토대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성공적인 생활방식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일본을 중산층 사회로 바라보는 것은 서구의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일본 마스크의 상징적 조작의 역할도 간과할 수가 없다(Ishida, 199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일본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기회와 결과 면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Lefranc et al., 2014). 객관적 차원에서 가구별 소득분포는 국제지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등성을 보여 준다. 나아가 실력을 중시하는 학교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적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사회는 매우 개방된 사회계층 및 이동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일본도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학성적과 사회적 평판도가 높은 소위 명문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일본사회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며 마스크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성공을 향한 열쇠로서 계층화된 고등 교육기관

에 입학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려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개인적 노력에 의한 결과로서 계층상승이동에 따른 사회적 보상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전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고용모델과 가족모델을 결합하여 구성되는 중산층모델은 이상적인 생애경로와 성공적인 삶을 단계별로 규정함으로써 발전국가의 사회적 토대를 강화시켜 준다. 일단 일본사회의 생활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의 대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생애 첫 목표로 삼는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좋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학업에 대한 노력을 보상받으며 대기업체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평생 고용을 보장받는다.

남성이 노동생애를 고용자에게 다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입신양명(立身揚名)과 같은 출세의 길을 걷는 데 비해, 여성은 그러한 성공을 쌓아 가는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의 안정과 가족구성원의 성공에 헌신하게 된다.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고 노부모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과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 중요한 안내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Hirao, 2001). 자녀가 교육적인 성공을 하도록 관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곧 발전국가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은 발전자본주의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에서의 극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업능력과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는 양질의 노동자와 취업자를 양산하여 일본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구성원들에게 직업과 일에 관한 의식만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체계의 기준을 제시하며, 발전국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근원적인 사회적 토대를 구성한다. 미국의 자유 자본주의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개인적인 자질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방식의 꿈을 대표한다면, 일본에서는 사회적 토대의 지원 아래에서 국가 관료제와 대기업체에게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공급,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발전자본주의의 사회적 토대는 경쟁과 평등의 절묘한 균형체제와 연관되어 있다. 일본사회에서 평등성은 문화적으로 강한 전통을 배태한 채 사회적인 차원에서 명시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주어진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성공과 나눔의 개념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을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경험 등을 통해 업무의 공유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남성의 성공은 모교와 고용주에 의해서 평가되며, 여성의 성공은 자녀의 교육적인 성과에 의해 측정됨으로써 사회적 토대의 복합성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열한 경쟁에 따른 가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평등성과 공정성의 조합은 일본의 경제적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생활방식은 대다수 구성원에게 하나의 준거 틀로서 매력적인 유인을 가지며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경험은 현실과 부합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해서 규정된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가치체계를 보여 준다. 안정된 경제성장과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승이동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많은 양질의 직업이 창출됨으로써 가능했으며 신(新)중산층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본 생활방식의 이상형은 사실상 많은 구성원에게 실현 가능한 것으로 다가왔으며,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획득할 가능성은 남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구성원이 발전국가의 이념적 지향점에 부합하는 문화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함에 따라 개인의 성공은 전반적으로 조직체 및 국가의 경제적 성공으로 연결되었다(서문기, 2015). 이러한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구조는 다양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조합되어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연결고리로서 사회구조의 피드백 기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가치체제는 실제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상승이동의 흐름을 지속시킴으로써 사회구조를 강화시켰고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 일본 발전자본주의의 성공과 역동성은 발전국가의 주도적 역

할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의 긴밀한 조합관계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단순한 총합이상의 체계로서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상승효과를 수반한 결과이다.

3.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

전후에서 1990년까지 일본은 국가와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나눔의 성장 단계를 경험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성공 신화는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된 가치를 공유시킴으로써 국가의 발전전략에 대한 지지와 호응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거품경제의 붕괴가 나타남에 따라 일본은 점차 경제적 정체의 단계로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시기에 빠져들면서 장기간 경기불황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나눔의 침체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발전국가의 사회적 토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기존의 이상적인 생애주기유형의 변화는 고용, 가족, 중산층의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점차 새롭고 도전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그림 1은 일본의 최근 대졸자 취업률을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리먼 쇼크 직후인 2010년 90.8%를 저점으로 2011년 91%에서 2018년 98%로 8년 연속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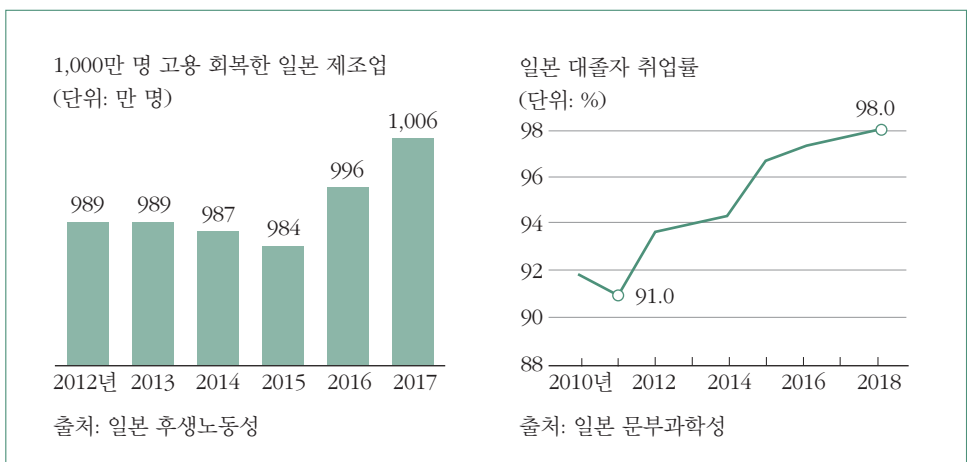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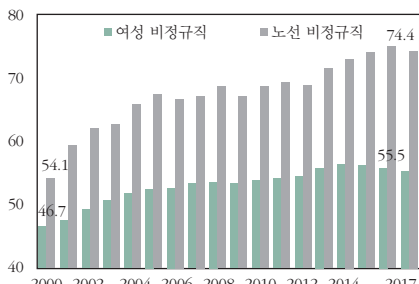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최근 고용현황

승하고 제조업 고용자 수가 다시 1,000만 명을 회복함으로써 경기회복과 일손 부족의 상황을 함께 나타낸다. 국가 공무원과 대기업체 사무직의 비중도 40% 이상의 증가된 변화를 보여 주며, 이는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여전히 이상적인 생애주기와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박병걸, 2017).

그러나 높은 취업률의 이면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낮은 임금수준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2,03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7.3%를 점유함으로써 2000년 26.1%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손 부족에도 정규직은 좀처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노년과 여성으로 각각 74.4% 및 55.5%의 분포를 보여 주며, 같은 시기 여성과 노년 취업자 대비 94.4%(438만 명)와 84.5%(240만 명)가 비정규직인 상태로 머물고 있어 임금상승 부진의 커다란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건은 실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둔화하면서 낮은 노동소득분배율로 연결되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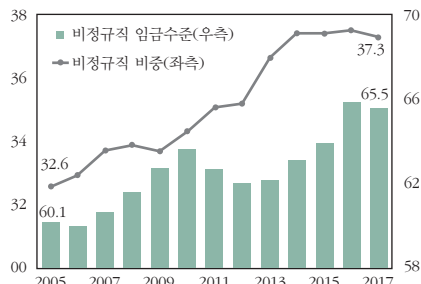
(비정규직 비중(% , %p))	2000(A)	2017(B)	(B-A)
전체	26.1	37.3	11.2
남성	11.7	21.9	10.2
여성	46.7	55.5	8.8
노년층	54.1	74.4	20.3

여성 및 노년층 비정규직 비중¹⁾(%)



주: 1) 임원을 제외한 여성 및 노년층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
출처: 후생노동성

비정규직 비중¹⁾ 및 임금수준²⁾(%)



주: 1) 임원을 제외한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
2) 월평균 소정 내 급여 기준
출처: 후생노동성

그림 2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

역으로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여성 및 노년층 인력이 소진된다면 고임금·저효율 구조를 배태하게 된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본의 고용모델에 대한 압력도 심각하게 다가오며 이에 따라 일본의 고용모델이 여전히 적합한지 또는 외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기업체의 구조조정이나 변화된 인적자원의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도적인 수준에서는 일본의 고용모델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bick, 2005). 실제로 일본의 기업체들은 구조조정을 꺼려하며 발전과정의 초기 단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고용보장이라는 암묵적 합의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본의 고용모델로 완전히 통합되는 취업자와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 종사자는 점차로 증가함으로써 내부 노동력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 기업체의 보수적인 가치체계는 젊은 층이 경기불황에 취약하다는 사회문화적 틀에 의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정규, 2014). 따라서 기업체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등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근로자를 잘 고용하지도 않는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인구의 구조변화 및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 및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 및 육아 부담과 고용불안을 향시 안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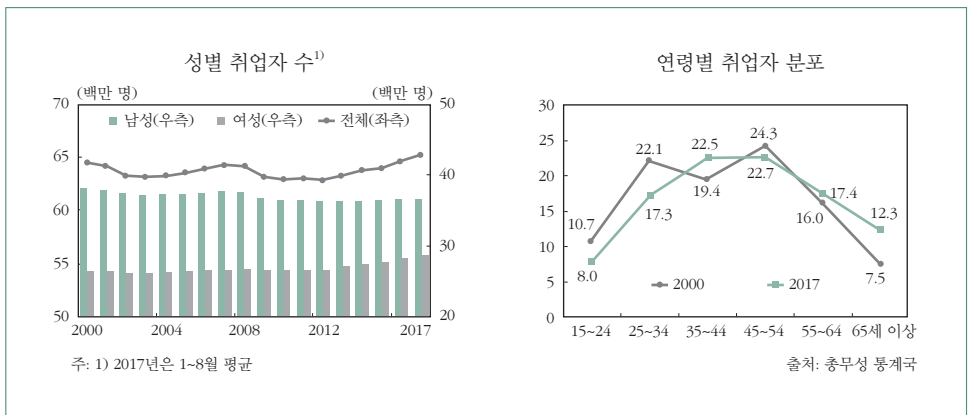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성별, 연령별 취업자 현황

때문에 노동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가족모델의 핵심 부분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전후시대의 유산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받으며, 그 출발점은 서구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서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일본의 여성운동이 나타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전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엄마와 아내로서의 여성과 생계담당자로서의 남성의 분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여성운동은 전통적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가정을 넘어선 사회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주장하였다. 오늘날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24.7%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노동 분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厚生労働省, 2018).

일본의 고용모델에서 성별 노동시장은 출발점부터 달랐으며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면서 분업의 역할에 대한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전문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은 스스로 가정과 직장의 양쪽 업무조정에서 종종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Sugihara and Katsurada, 2002). 일본 기업체가 경력 트랙의 취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으로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수행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일본 인구의 90.8%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65.5%가 육아를 포함한 가사업무 또한 사회생활의 직장업무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World Values Survey, 2018).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책임을 지는 등 가사에 대한 이상적인 역할의 가치체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직 여성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본의 가족 및 고용 모델에서 가족으로서 책무와 직업으로서 경력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중산층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평등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경기회복과 적절한 경제적 불평등의 유지에 방해가 되며, 일본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평등성에 대한 혐오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집단에서는 성장경로의 회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등 대신에 경쟁의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Fujimoto, 2017). 적어도 국가엘리트 집단에서는 정체된 계층구조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

표 1 일본의 계급구조

	인구(만 명) (%)	남성(만 명) (%)	여성(만 명) (%)	수입(만 엔) 연평균	빈곤율 (%)	미혼율 (남성; %)
자본가	254 (4.1)	194 (5.4)	60.1 (2.2)	861	4.2	12.9
신중간	1,285 (20.6)	866.9 (24.2)	418.5 (15.6)	499	2.6	18.0
구중간	806 (12.9)	533.3 (14.9)	272.6 (10.2)	303	17.2	-
정규직 노동자	2,192 (35.1)	1454.3 (40.7)	738.1 (27.6)	370	7.0	31.0
비정규직 노동자	929 (14.9)	526.9 (14.7)	40.1 (15.0)	186	38.7	66.4
파트타임 주부	785 (12.6)	-	784.7 (29.3)	-	-	-

자료: 橋本健二(2007: 125-139)에서 재구성.

며, 이는 나눔의 성장과 평등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경쟁과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新)자유주의 발전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소득분포는 점점 더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심화정도는 미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OECD, 2017).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인구분포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소득은 인구비중이 4%에 불과한 자본가 계급에 비해 2.4~4.6배의 차이를 보여 준다.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커다란 편차가 있으며, 빈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舊)중간계급이 감소하고 전문직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체하고 있는 신(新)중간계급은 반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미혼비율이 높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66.4%)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계급격차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반영하지만 불평등해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제엘리트의 충원방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이래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패쇄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며, 기업체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경로도 사회적 신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성취지위

보다는 획득지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인 중산층모델의 작동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초가 된다. 국가 및 사회엘리트 집단들은 사회 평등의 해체를 바라면서 일반적인 중산층모델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상적인 생활 세계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Pekkanen, 2004). 전반적으로 가구별 소득불균형이 증가하는 것은 변화하는 가구와 연령구조 때문이지만, 구성원이 기존의 이상적인 생애주기를 성취하기가 더 이상 쉽지 않으며 심지어 명문대에 입학하더라도 졸업 이후 대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일본 발전모델의 구조는 이미 균열되기 시작하였으며 변화의 필요성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사회적 토대의 완전한 붕괴를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만약 일본경제가 성장경로로 점차적으로 복귀한다면 사회적 토대는 다시 적응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고용모델의 안정화도 가져오며, 자격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이 다시 부족해지면 기업체는 가능한 많은 노동력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017년 노동시장의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 말의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의 기초 속에서 앞으로도 몇 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總務省, 2018). 중산층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젊은 세대에서 양질의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기회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간다. 오늘날 일본의 핵심적인 가치는 실용주의와 융통성 있는 적응 능력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산층모델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가족모델에서 제시하는 역할을 재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보다 발전자본주의의 사회적 토대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이다. 경기불황의 위기가 가까운 장래에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요인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성별 역할에 대한 갈등, 중산층의 몰락 등이 심화되고 확산이 된다면, 사회적 모델의 근원적인 재구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IV. 결론 및 함의

일본의 발전국가모델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함께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며, 또한 현재 구조개혁 안건들의 상당수도 진행 중에 있고 장·단기 전망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정권이 발족한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이 회복하고 2018년 2.4%의 완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수치 저하가 아니라 노동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과감한 통화 완화 및 재정 정책과 민간투자 촉진의 성장전략으로 20년 이상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불평등, 인구변화 등 정책의 차별화된 효과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성장기반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및 개혁이나 사회이동의 활성화 및 사회보장의 확대 등과 같은 주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제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저항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회복은 사회구조의 변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되는 신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통합된 이상적인 생애주기는 전반적으로 혹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산층에로의 상승이동이 훨씬 더 일반화가 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지위는 점차 만족도를 잃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에게 발전국가모델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승이동의 다음 단계로 신중산층으로부터 최상의 위치인 엘리트층으로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일본 국민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그러한 위치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더 많은 대학졸업자와 신중산층이 양산되더라도 어느 사회이든지 엘리트의 위치는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동에서 천장에 도달해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신호는 초기 발전단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대기업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관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불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오래전부터 명문대 출신에게 더 나은 직장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오늘날과 비교할 때 차이점은 높은 경제성장과 신중산층의 확장을 가정하는 경우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도달한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높은 신분의 획득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발전국가의 성장전략을 매력적인 요소로 유인해 왔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심각한 인구학적 변동은 일본의 사회적 토대의 지속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低)출산·고령화로 인해 피(被)부양 인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가족형태의 변화, 청년층 및 고령자 세대갈등, 1인 세대의 증가, 가족의 부와 교육의 대물림 현상 등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격차사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고령화과정을 포함하여 인구학적 흐름은 사회적 모델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공급부족 현상은 고용모델과 이에 맞춰 새롭게 조정된 가족모델을 다시 유용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과정의 부정적인 효과들로 인해 현재의 사회적 모델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계화과정과 이민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현실적인 전략이 선택지로 남아 있을 뿐이다.

첫째, 일본 경제의 세계화는 기업체가 추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가 대량생산기지를 북미와 유럽,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역에 광범위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때때로 경제침체의 숨겨진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생산기지의 세계화는 국내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체의 수익성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생산 부문과 달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직업군에서 노동력 부족을 이미 경험함으로써 경제적 세계화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계선을 개방하는

데 매우 인색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Shipper, 2002). 이민자들은 인종적 다양성과 계층화로 이끌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일본 중산층모델의 해체를 가져와 현재의 사회적 토대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동안 이념적 장치로서 기능해 온 경제민족주의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으며, 이민에 의한 사회적 토대의 재구성으로 발전전략의 재설정 또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발전모델은 국가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에 기초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이 사회적 토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국가의 성장과실은 개인의 성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발전국가의 성장계획은 구성원에게 요구했던 일본의 생활방식으로 뿌리를 내려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였다. 국가엘리트와 국민들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서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의 이상형을 많은 구성원에게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대부분 서구 경제에서보다 훨씬 강한 연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적 토대는 발전경로의 특수성과 역동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침체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사회적 토대는 구조적 긴장과 위기의 징후와 함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발전국가의 특성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함께 사회 발전단계가 바뀔에 따라 효용성의 한계를 가져왔으며, 관료제의 배타적 자율성과 사회적 동원능력은 점차 약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성별 분업과 가족모델은 더 이상 수용가능하지 않으며, 고용모델에 완전히 통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 평등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남녀 고용격차가 상당히 일과 가정의 업무상 균형과 공존이 어려운 상황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가치체계의 분절과 아노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을 통해 달성하는 학업성취와 사회이동의 경

로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교육적 성과와 경제적 성취도 대다수 국민에게 더 이상 유일하고 배타적인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의 단계가 양의 추구에서 질적 변화로 진입함에 따라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생활방식의 개별화와 다원화를 가져오며, 국가의 경제성장만이 더 이상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체되거나 연기된 개혁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오고,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고용호황이 정점을 지나 중단될 수가 있다. 현재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확대와 국가의 재정적자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발전 없는 성장은 훨씬 더 심각한 도전을 안겨 줄 것이다. 이는 발전국가모델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발전전망 및 전략 설계의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호응이라는 근원적인 토양 위에서 정책추진의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실질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투고일: 2019년 4월 29일 | 심사일: 2019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9일

참고문헌

- 권영주·김근세·라휘문·정용덕. 2001. “일본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1981-1996.” 『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37-266.
- 김시윤. 1999. “국가개입과 경제성장: 지대추구론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1권 4호, 755-773.
- 김정규. 2014.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 박병걸. 2017. 『최근 일본 고용여건 개선세의 주요 특징』.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 사사다, 히로노리(佐田博教) 저. 박성진 역. 2014. 『일본 발전국가의 기원과 진화』. 한울.

- 서문기. 2015.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권 2호, 78-102.
- . 2016. “한국의 사회발전경로에 관한 이론적 소고.” 『사회과학논총』 18권, 1-25.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 윤영관. 1999.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 자본주의: 시장·제도·국가의 관점에서.” 백광일·윤영관 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재원. 2013. “일본의 장기침체와 정책대응: 평가와 교훈.” 『동북아경제연구』 25(4), 121-164.
- 임혜란. 2018.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주노종·이우형. 2017. “일본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제도와 경제』 11(2), 153-175.
- 橋本健二. 2007. 『新しい階級社会·新しい階級闘争』. 東京: 光文社.
- 文部科学省. 2018. 『大学卒業者の就職状況』. 東京: 文部科学省.
- 総務省. 2018. 『就業構造基本調査』. 東京: 総務省 統計局.
- 厚生労働省. 2018. 『社会保障と経済成長』. 東京: 厚生労働省.
-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2013.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Y: Crown.
- Amyx, J. 2004. *Japan's Financial Crisis: Institutional Rigidity and Reluctant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g, H. 2006.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NY: Zed Books.
- Davis, D. 2004. *Discipline and Development: Middle Class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jimoto, M. 2017. “Japan’s Employment System and Public Policy: 2017-2022.” *Japan Labor Issues* 1(1), 22-25.
- Gibney, F. 1998. *Unlocking the Bureaucrat's Kindom: Deregulation and the Japanese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aggard, S. 1990. *Pathways from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ll, D. 2004. “Japanese Spirit, Western Economics: the Continuing Salience of

- Economic Nationalism in Japan.” *New Political Economy* 9(1), 79-99.
- Hashimoto K. and J. Miyasaka. 2000. “The Comparison of Stratification and Class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0(1), 37-64.
- Hirao, K. 2001. “Mothers As the Best Teachers: Japanese Motherhood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M. Brinton, 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ghes, C. and A. Fukushima. 2004. “U.S.-Japan Security Relations: Toward Bilateralism Plus?” In E. Krauss and T. Pempel, eds. *Beyond Bilateralism: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Ishida, H. 1993. *Social Mobility in Contemporary Japan*. Oxford: Palgrave Macmillan.
- Johnson, C. 1995.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Y: W.W. Norton and Company.
- Katada, S. ed. 2013.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East Asian Regionalism*. London: Routledge.
- Katz, R. 1998. *Japan, the System That Soured: The Rise and Fall of the Japanese Economic Miracle*. NY: M. E. Sharpe.
- Latham, R. 1997. *The Liberal Moment: Modernity, Security, and the Making of Postwar International Order*.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franc, A., F. Ojima, and T. Yoshida. 2014.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Japan among Sons and Daughters: Levels and Trend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7(1), 91-134.
- Macintyre, A. and B. Naughton. 2005. “The Decline of a Japan-Led Model of the East Asian Economy.” In T.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OECD. 2017.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Önis, Z.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s.” *Comparative Politics* 24, 109-126.
- Pekkanen, R. 2004.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Civil Society in Jap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363-388.
- Rebick, M. 2005. *The Japanese Question: Power and Purpose in a New Era*. Washington DC: AEI Press.

- Reischauer, E. and A. Craig. 1973. *Japan: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Tokyo: Charles E. Tuttle.
- Schaede, U. 1995. "The 'Old Boy' Network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1(2), 293-317.
- Shibagaki, K. 1994. *The Development of Japanese Capitalism and Its External Relations from 1945 to the Present*.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Shipper, A. 2002.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Foreign Workers in Japan." *Critical Asian Studies* 34(1), 41-69.
- So, A.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System Theories*. London: Sage.
- Sugihara, Y. and E. Katsurada. 2002. "Gender Role Development in Japanese Culture: Diminishing Gender Role Differences in Contemporary Society." *Sex Roles* 47, 443-452.
- Suh, M. 1998.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From the State-sponsored to the Quest of Quality of Life*. NY: Praeger.
- . 2017. "Determinan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Tracing out the U-shaped Curve by Economic Grow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255-269.
- Vogel, S. 2006. *Japan Remodeled: How Government and Industry Are Reforming Japanese Capitalism*.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u, W. 2005. "Changes in Women's Postmarital Employment in Japan and Taiwan." *Demography* 42(4), 693-717.
- World Values Survey. 2018. *Online Data Analysis*. <http://www.worldvaluessurvey.org>

Abstract

Developmental Pathway and Social Base in Japan: A Prospect for Sustainability Transitions

Moon-Gi Suh Soongsil University

The developmental pathway in Japan contains dynamic interactions that launch the country into a different mode of social structure from the West. This study, from this angle, explor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developmental state and diagnoses how social base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stage of development, by which the process has been differentiated. It contends that state effectiveness is a key criterion evaluating economic growth, which in turn accumulates the seed of dismantling the very engine of development, and undertak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social base and institution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gender role and the family model are not acceptable any longer and do not support the employment model where the integration ratio of labor into the model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and fragmented. To renovate Japan's distinctive model in mediating the labor market and supporting social base, the model needs to reset by addressing the ceiling effect of social upward mobility and demographic change. Furthermore, the globalization and value change in Japan for economic integration can be two-part critical challenges in the long term, but there is no prospect that the developmental state is drawing to a close. Although the very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has, paradoxically, eroded the powers of the bureaucracy to set various strategies, the upgraded role of social

base and models for the new stage in facilitating sustainability via social trust remains to be established.

Keywords | Developmental Pathway, Japanese State, Social Base, Sustainability

